

#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사회대토론회'의 내용과 의미

손영우 (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 연구원)

## ■ 머리말

지난 2012년 7월 9~10일 프랑스에서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지방단체, 사회단체의 3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여한 '사회대토론회(Grande conférence sociale)'가 개최되었다. 이는 사회당 정부가 경제·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제 사회주체들과 논의하는 자리로서, 이전의 사회적 대화 방식과 그 내용과 형식에서 대조를 이루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 사회대토론회는 정부가 특정 주제에 대해 시행하는 일회적 토론회가 아니라, 제반 사회주체들과 함께 향후 1년간의 사회·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진행계획을 마련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현 사회당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전망하고, 사회적 성과를 가능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길잡이이자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회대토론회의 배경, 경과 및 주요 내용, 주요 사회적 주체들의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 올랑드 정부와 사회적 대화

올랑드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제기하였다. 이미 대선기간에 올랑드 후

보는 당선된다면 2012년 여름에 임기 동안 진행될 주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내용과 진행 과정, 방법을 논의할 사회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경제사회환경위원회를 방문하여,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사회적 대화는 하나의 문제이거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의 관문이며, 결정과정에 있어 하나의 난관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는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결정을 완전히 수용하도록 하여 효과적으로 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적 대화는 예외적 순간을 위한 것도, 시위가 있을 때 하는 대응도, 특정 환경에서 소집된 노사대표를 위한 것도 아니다. 사회적 대화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과정이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구현하는 정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에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위, 직장생활조건, 근로자와 그의 권리, 또한 기업을 변경하는 어떠한 법도, 보다 정확하게는 어떠한 예비법안이나 제안도, 대표단체의 예비합의 없이 설정되거나 채택될 수 없다. 이것은 또한 여기에서 진행될 사회대토론회의 정신이기도 하다”<sup>1)</sup>고 주장하여 사회적 대화 위상과 사회대토론회의 성격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올랑드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과거 사르코지 정부와 대조를 보인다. 과거 사르코지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퇴직연금 개혁과정에서 보듯, 정부가 필요 사안에 대해 노사대표를 소집하여 정부안을 제출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 노사간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 시한 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당성의 외형을 갖추면서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특징을 지녔지만, 사회적 주체로부터 사회적 대화가 입법 추진을 위한 허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올랑드 정부는 의제설정부터 방법설정, 진행계획까지 전체 과정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하여 여러 구체적인 측면에서 올랑드 정부의 사회대토론회

1) “Discours de M.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2012년 6월 12일, <http://www.elysee.fr/president/les-actualites/discours/2012/discours-de-m-le-president-de-la-republique-au.13411.html>

는 차별성을 보인다. 이전의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회고위급회담(sommet social)’은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 전국노사단체 대표만을 초청하여 정부의 정책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이번 ‘사회대토론회(Grande conférence sociale)’에는 사회적 주체 간의 조정기구인 경제사회환경위원회에서 300여 명이 넘는 전국노사대표가 참여하여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회 전후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7개의 주제를 준비한 담당 부처에서 관련 사회적 주체를 공식·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준비와 사전 과정을 거쳤다.

〈표 1〉 사르코지 정부와 올랑드 정부의 사회적 대화 비교

	사르코지 정부	올랑드 정부
대화의 폭	특정 주제, 사안별	경제정책 전반, 총체적
대화시기	정부 필요시 소집	전체 집권기간을 대상
의제선정	정부	노사정
의안제출	정부	노사정, 사회단체(의견 제시)
진행과정	정부가 의안을 제출하고, 설정한 시간 내 노사 합의를 요구하여, 합의 시 노사합의안을 입안, 합의가 없을 시 정부안을 추진	노사정이 의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담당부서별로 노사(사회단체) 공동논의를 진행하여 합의안 도출
총리와 정부의 역할	정부안 제출, 합의시한 설정, 총리의 역할이 없음	정부 부처별로 노사논의를 주도·진행하고, 총리는 이를 총괄함. 매년 진행과정 결산을 발표하고, 이 과정을 추진할 사회적 대화 위원회를 건립

## ■ 사회대토론회의 진행과정 및 주요 내용

사회대토론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의 운영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내년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노사가 토론하고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의제를 선

정한다. 이를 사회대토론회에서 제반 사회적 주체들이 토론을 통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공유한 이후 진행계획을 합의하고, 이후 사안별로 담당 정부부처가 노사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매년 사회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진행과정에 대한 결산을 발표·공유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준비과정

7월의 사회대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이미 지난 5월 29일 장-마크 애로 총리는 관련 부처장들과 함께 노사단체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사회대토론회의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이어 6월 5일 또 다시 사회대토론회의 진행방법을 놓고 준비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관련 의제에 대해 노사뿐만 아니라, 관련 사회단체에 의견을 묻고 제시된 의견을 정부 사이트에 공개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의제와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동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정부와 그들 간의 끊이지 않은 대화이다”<sup>2)</sup>라는 정부의 주장처럼 사회대토론회는 단지 행사 일정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대토론회를 전후로 공식 혹은 비공식 모임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노사단체의 참가자와 관련하여, 대표성을 인정받은 5개의 노조(CGT, CFDT, FO, CFTC, CFE-CGC)와 3개의 사용자단체(Medef, CGPME, UPA) 이외에 7개의 주체별로 진행되는 원탁회의의 주제와 관련 있는 단체일 경우, 사안에 따라 Sud Solidaires, FSU, UNSA 같은 소수 노조들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용자단체인 Usgeres, 농업부문(FNSEA), 자유직종(UNAPL), 임시직종(patronat de l'interim) 관련 단체도 초대하여 노사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2) Le Monde, 2012년 7월 9일자, “Après la négociation européenne, le dialogue social.”

## 진행과정

7월 9~10일간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회대토론회는 9일 오전 대통령의 개막연설로 시작하여 10일 오후 총리의 폐막연설로 끝이 났으며, 9일 오후와 10일 오전 2회에 걸쳐 7개 핵심 주제에 대한 원탁논의가 진행되었다. 첫날에는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하여 노사담당자들과 의제에 대한 토론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튿날에는 이에 대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주제별 토론에서는 참가한 노사단체와 지방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공유하였는데,<sup>3)</sup> 가령 첫 번째 주제인 고용과 관련하여 청년기업경영주센터, 자선구호단체 엠마우스, 전국실업자비정규직운동 등 32개의 관련 사회단체가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 주요 의제

〈표 2〉 사회대토론회의 7개 원탁회의 주제와 담당 장관

주제	담당부처
일자리 개발, 청년고용 우선 (Developper l'emploi et en priorite l'emploi des jeunes)	노동부 장관 미셸 사팽(M.Sapin)
평생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Developper les competences et la formation tout au long de la vie)	직업훈련 담당 장관 티에리 르팡탱(T.Repentin)
공정하고 효과적인 보상시스템 보장 (Assurer des systemes de remunerations justes et efficaces)	경제부 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P.Moscovici)
직장 내 삶의 질 향상과 평등 도달 (Atteindre l'egalite professionnelle et ameliorer la qualite de vie au travail)	여권부 장관 나자 발로-벨카셈(N.Vallaud-Belkacem)
산업재건의 조건 충족 (Reunir les conditions d'un redressement productif)	산업재건부 장관 아르노 몽트부르크(A.Montebourg)

3) 사회단체들의 의견은 다음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http://travail-emploi.gouv.fr/espaces,770/dialogue-social,2173/dossiers,2178/la-grande-conference-sociale,2154>

주제	담당부처
사회보장과 퇴직연금의 미래 보장 (Assurer l'avenir des retraites et de notre protection sociale)	복지부 장관 마리솔 투렌(M.Touraine)
공공부문 근로자와 함께 공공부문의 현대화 (Moderniser l'action publique avec ses agents)	국가개혁 장관 마릴리즈 르브랑슈(M.Lebranchu)

## 합의 내용 : 사회적 로드맵<sup>4)</sup>

아래 로드맵에 따라 합의내용을 진행하고, 정부는 내년 여름에 사회대토론회의 첫 번째 결산을 통해 진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를 수행함과 동시에 2014년 계획을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 총론: 사회적 대화

근로자대표기관	교섭	2012년 12월 중순	2012년 말
헌법수준에서 라르셰법* 평가	사회적 파트너와 준비작업	2012년 가을	-
기업 내 의무교섭의 합리화	작업그룹	2012년 말	-
노사위원회 재정투명성	입법조항	2013년 초	2013년 초
상급노조조직책과 활동가경력 인정	교섭	2013년 초	-
기업운영기구 내 근로자위치	노사협의	2013년 초	-
노조대표성	결산	2013년 2/3분기	-
사용자단체대표성	사용자 제안에 기반한 방식 규정	-	-
재정 투명성	결산	-	-

4) 합의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Feuille de route sociale”과 “2012~2013: La “feuille de route” sociale de Jean-Marc Ayrault” (Le Monde, 2012년 7월 13일자)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제1의제 : 고용

주제	방법	개시	종료
미래고용*	노사자문	2012년 여름	2012년 9월
고용안정화	노사교섭	2012년 9월	2013년 1/3분기 말
세대계약*	노사교섭	-	2012년 말
빈곤퇴치	대토론회	2012년 가을	2012년 가을
불법노동	불법노동근절위원회 모임	2012년 가을	2012년 가을
2011년 청년고용관련 전국협약	단계별	2012년 말	-
장애인 고용	노사교섭	2013년 초	2013년 중반
직업경로안정화	전문가 그룹에 접근방법 위탁	2013년 봄	2013년 가을
2008년 노동시장 현대화 협약	평가	2013년 봄	2013년 봄
기업 공공지원	평가	-	-

## 제2의제 : 직업훈련

주제	방법	개시	종료
개별 교육계정	직업훈련위원회의 연구	2012년 9월	2013년 1/3분기
진로 공공서비스	결산	2012년 가을	2012년 가을

## 제3의제 : 보상

주제	방법	개시	종료
최저임금	부처 간 공동작업그룹, 계획안 작성	-	2012년 말
경영진의 과도한 보상	법안작성	-	2012년 말
재정출자와 근로자저축관련 조치*	교섭	2013년	2013년

## 제4의제 : 직장평등과 직장 내 삶의 질

주제	방법	개시	종료
남녀평등	진로위원회 회동	2012년 9월	-
직장평등과 직장 내 삶의 질	교섭	2012년 9월	2013년 1/3분기 말
직업분류 분석	교섭	2012년 9월	2013년 1/3분기 말
기업의 사회적 평가	검토	-	-

## 제5의제 : 생산증대

주제	방법	개시	종료
경쟁력 특구	검토	2012년 하반기	2012년 하반기
산업 경쟁력	루이 갈루아 위임	-	2012년 10월

## 제6의제 : 사회보장

주제	방법	개시	종료
사회보장 재정마련	고등위원회 진단, 이후 노사협의	2012년 9월	2013년 말
퇴직연금	퇴직연금진로위원회(COR)의 진단	2012년 9월	2013년 초
	특별위원회의 경로 작성	-	-
	노사협의	2013년 봄	-

## 제7의제 : 공공부문

주제	방법	개시	종료
직업위험방지	협약형태의 교섭	2012년 9월	-
노조수단관련 개혁	협의	2012년 가을	-
재정출자와 근로자저축 관련 조치	교섭	2012년 가을	-
직업평등	협의, 교섭	2012년 가을	-
공공정책검토의 결산, 공공서비스의 임무	협의	2012년 가을	-
직업경로와 경력	협의, 사안에 따라 교섭	2012년 가을	-

주 : 1) 라르셰법(loi Larcher) : 정부가 노사관련 법안을 입안 시 노사간 협의를 의무화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

2) 미래고용(Emplois d'avenir) : 빈곤지역의 저학력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방단체, 교육분야에 정부지원 일자리 마련 정책.

3)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 : 26세(경우에 따라 30세) 청년을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고, 55세 이상의 연장자의 후견을 받도록 하는 정부지원계약.

4) 재정출자(participation financière)와 근로자저축(épargne salariale) : 근로자와 기업의 성과를 결합하고, 단체저축과 기업투자 증진의 목적을 지닌 조치.

## ■ 사회대토론회를 둘러싼 사회주체들의 반응

사회대토론회 준비기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 개혁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힘겨루기와 불만이 표출되긴 하였으나, 토론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사 모두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가령 CGT의 베르나르 티보 총장은 사회대토론회 전에 “우리는 여기에 방법이나 논의하고, 일정을 조정하러 모인 것이 아니다. 즉시 결정이 내려지기를 요구한다”고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사회대토론회 이후엔 “우리는 새로운 진로에 서 있다. 로드맵의 많은 일정들이 우리가 제기한 구체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프랑수아 쉐렉 CFDT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대화의 중요한 단계였고, 잘 짜여진 일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황은 각자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CFDT는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현재 사회적 대화에 대해 가장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FO는 지난 6월 28일 성명을 통해, “노조의 자유와 교섭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헌법화를 반대한다”며 올랑드 대통령이 제기한 사회적 협의 의무의 헌법 명시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sup>5)</sup>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의 개혁이 한발 더 진전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FO의 스테판 라르디는 “FO처럼 모든 유연화에 반대하는 노조들은 그들의 불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교섭 시 빈자리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 노조 측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사회적 대화 자체에 대한 거부는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사용자 측과 관련하여, Medef는 본 토론회에 소위 ‘유연안정성(flexisécurité)’의 증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개막연설에서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가 고쳐야 할 비용구조에서의 어떤 경직성이 낳은 결말이기도 하다”고 지적하여, 사용자 측의 호의를 사

5) Le Monde, 2012년 6월 28일자, “Force ouvrière entre (quasiment) en opposition.”

기도 하였다. 나아가 토론회 기간 중 로랑스 파리조 Medef 회장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단체협정에 의한 계약파기’ 도입에 의한 ‘평화로운 해고’를 제기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특히 마지막 날 애로 총리의 폐막연설은 파리조 회장의 반발을 샀는데, 애로 총리는 지난 봄 사르코지 정부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경쟁력-고용’<sup>6)</sup> 교섭을 중단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해고비용을 규제하며, 이윤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폐쇄할 경우 새로운 사용자를 찾아 인계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방향에서 ‘고용안정화’ 교섭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파리조 회장은 이것은 현재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새로운 경직성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파리조 회장은 “우리가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혀 이후 로드맵 일정에 참여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sup>7)</sup>

이렇게 사회적 주체들은 대화 석상에서 자신의 불만과 요구를 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과의 협력투기를 시도하였지만,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대화의 전망

사회대토론회는 많은 기대와 함께 긴박한 일정을 제시하며 끝이 났지만, 프랑스에서 사회적 대화는 사회대토론회의 로드맵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돌입하였다. 이에 세대계약, 퇴직연금개혁, 해고와 과대임금 관리, 최저임금, 직업평등이 사회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첫 번째 작업장이 되었다. 이 사회적 대화 방식은 신속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로 10월 19일에 세대계약(contrat de génération)에 대한 첫 번째 노사합의가 있었다. 이례적으로 5개의 대표노조와 3개의 사용자단체 모두가 합의한 이 계약은 12월 12일에 장관협의회에 입법안으로 제출되고 2013년 초 의

6)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업이 노동시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7) L'Express, 2012년 7월 11일자, “Pourquoi Laurence Parisot ne digère pas la conférence sociale.”

회를 통과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 경제적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절실함 등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좋은 환경으로 지적된다. 또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호조건으로 지적되는 사안은 대표노조의 조합원 확대 경향이다. 프랑스의 주요한 대표노조인 CGT와 CFTD는 지난 10년간 급속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조합원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고, 작년에도 각각 1.87%가 1.42%의 조합원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조합원 확대 경향은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대화가 항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해고 규정이 논의될 ‘고용안정화(sécurisation de l'emploi)’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시장과 유연화 문제, 근로자와 정부가 대립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같은 문제에서 노사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적극적 합의(compromis positif)’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과거 정부에서 소집에 의해 추진된 합의를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차별성 자체가 관심을 증대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대노조인 CGT의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의 내부분쟁이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내년 3월, 14년 만에 사무총장 교체를 앞두고, 차기 사무총장은 ‘민간부문 출신의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베르나르 티보 총장과, 산별연맹의 분권화와 더욱 협력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다수의 중앙위원 간의 대립이 그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개혁노선을 지닌 사무총장 후보들 간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로 나타나고 있지만, CGT 내부의 분과 문제와 결부되면서 더욱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미 이 문제를 원인으로 사회대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노조대표단 모임에 사무총장이 불참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노조 간의 협력을 주도해야 하는 CGT의 지위로 보았을 때, CGT의 리더십 부재가 노조 간의 과편화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사용자단체 간의 분열도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긴장으로, 상대적으로 기간제계약(CDD)을 다수 사용하고, 구조조정이 빈번하지 않은 중소기업과 기간제계약보다는

해고와 구조조정에 더욱 이해가 많은 대기업 간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사용자총연맹(CGPMÉ)은 MEDEF가 노조단체와 기간제계약에 대한 세금부과와 해고와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적 완화 간의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제기한 바 있다.<sup>8)</sup> 이러한 거래의 실재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상황은 현재 개혁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존재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파트너가 테이블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문제일 것이다. 왜냐하면 노사 한쪽이라도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난다면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의 참여를 둘러싼 노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 또한 그만큼 증대되어 노사진영의 사회적 대화로부터 이탈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익단체인 노사단체가 더 이상 대화 테이블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익단체 내부의 요구도 저버리지 못할 것이다.

지난 1997년에 집권했던 사회당의 조스팽 정부 역시 집권 초기 이와 유사한 ‘고용, 임금, 노동시간에 대한 전국토론회(conférence nationale sur l’emploi, les salaires et le temps de travail)’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토론회는 애초에 매년 개최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1997년 10월 단 한 차례 개최된 후 중단되고 말았다. 이유는 토론회장에서 정부가 35시간 노동제 도입을 발표하자 사용자단체 대표가 퇴장과 더불어 회장직을 사퇴하고, 이후 선임된 신임회장단이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스팽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난항을 겪게 된다. 노조 역시 전국 노조의 힘을 발휘할 공간이 없어진 상황에서, 조직률이 낮고 파편화되어 있는 기업 노조 중심으로 35시간 노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도입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질된다.

이렇듯 사회적 대화는 현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위기 상황에서 좌파정부는 노조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조율 없이 자신의 사회·경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의 경

8) Le Monde, 2012년 10월 12일자, “Des hauts et des bas dans les négociations sociales.”

제·사회 정책 전반의 실행을 위한 자율성을 지니느냐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된다.<sup>9)</sup> 이것은 바로 올랑드 정부가 사회적 대화가 단지 개별적인 고용, 임금, 노동시장 정책의 도입을 위한 수단 이 아니라, 하나의 주요한 국정운영 방식으로 채택하고 노사의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일 것이다. 노조조직률과 대표노조의 파편화 정도가 사회적 협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일반적인 학계 주장과는 달리, OECD 국가 중 노조조직률이 가장 낮고 5개 이상의 전국 노조로 파편화된 프랑스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노력은 중대한 실험이자 흥미로운 대상이 아닐 수 없다. **KLI**

9) 경제적 위기 속에서 프랑스 사회당 정부와 정책적 자율성에 대해선, 손영우, 「재정·환율 손발 묶인 좌파정부, 비장의 무기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새로운 실험, 성공할까?」, 프레시안(2012. 6. 12)을 참조.